

*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자료

- 02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
- 07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끝내야
- 08 평화협정 정세의 도래
- 11 침략적 한미동맹과 이명박의 대북 강경책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걸림돌
- 13 한반도 비핵화, 미군철수, 남북군축 함께 해결하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떨쳐나서야
- 15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충분히 가능하다
- 17 평화협정 실현운동, 이미 시작되다
- 18 평화협정 체결되면 이렇게 좋아져요
- 22 국민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평화협정 실현운동, 이것이 궁금해요.

- 23 주한미군이 나가면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늘어나지 않나요?
- 24 주한미군이 나가면 북한이 남침하지 않을까요?
- 26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 27 북한이 남한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도 있지 않나요?
- 28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요?
- 31 주한미군이 나가면 주변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않을까요?
- 32 주한미군이 나가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 33 이런 평화협정 어때요?
- 35 첨부자료 :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휴전협정은 전투의 정지를 의미할 뿐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지 못해왔습니다. 미군 철수를 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방해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채, 미군은 60년 가까이 우리 땅에 주둔하며 주인행세를 하고 있고 민족 분단과 전쟁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전쟁 위험

해마다 꽃게잡이 철만 되면 서해에서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집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서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해서 지금도 남북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이죠. 남북의 젊은이들이 고귀한 목숨을 잃은 1999년과 2002년의 서해 교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북이 다투는 사이 서해 황금어장에서 중국어선이 꽃게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뿐인가요? 키 리졸브·폴 이글(Key Resolve·Foal Eagle), 을지 프리덤 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등 이름도 생소한 한미연합군의 전쟁연습이 수만 명의 군인과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수시로 실시됩니다. 이런 전쟁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 목적으로 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미국은 냉전 해소 이후만 해도 1994년 영변 핵위기, 1998년의 금창리 핵위기, 2003년의 2차 북핵 위기 등 수차례에 걸쳐 북에 대한 공격을 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의 주범입니다.



한·미 해병대 시가전 훈련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 해병대 대원들이 10일 경기도 포천시 미군 로드리 게스 사격장에서 한국 해병대 대원들과 시가전 훈련을 하고 있다. 【연세사】

● 주권 침해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군사주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2012년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지만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군작전통제권은 아예 환수하지 않기로 했고, 육군 작전통제권도 미국의 온갖 제약으로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 1항에는 한국은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도 20조 원에 이르는 비용을 한국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미군범죄나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 SOFA에 기대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짓밟는 이 모든 일들이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위해 감수해야 할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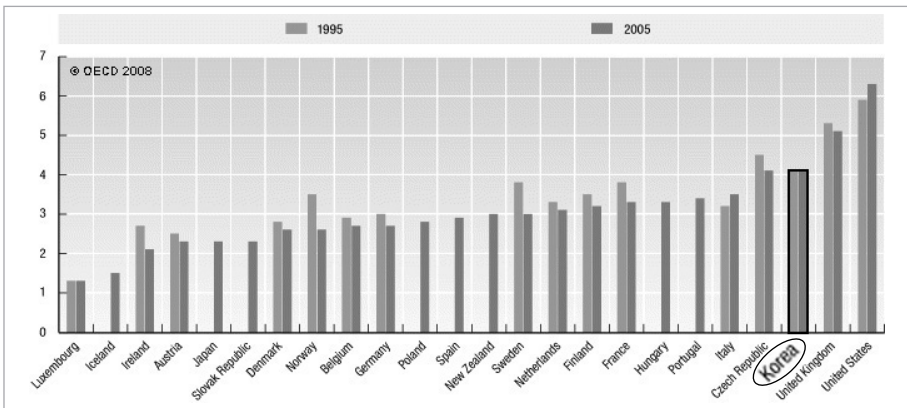


〈2004년 미군 신촌 칼부림 난동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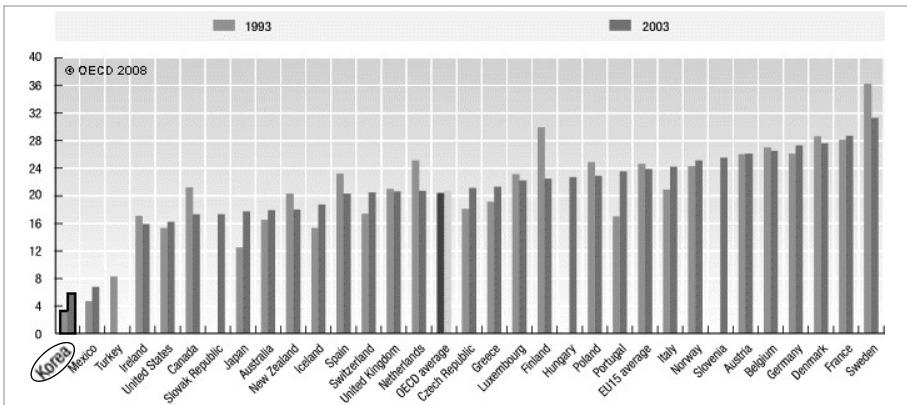
● OECD 최고 수준의 국방비 VS 최저 수준의 복지비

한국의 국방비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입니다. 한국의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비중'은 GDP 대비 4.3%로 29개 국가 중 미국, 영국에 이어 3위입니다.

이처럼 국방비 지출이 지나치다 보니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5.7%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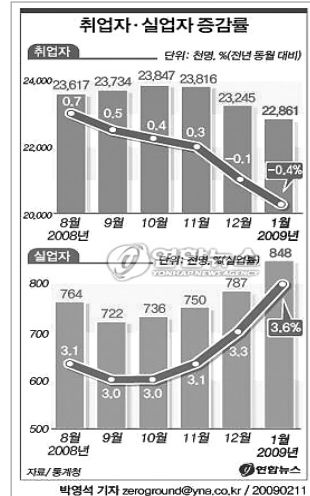
〈'OECD Factbook 2008', 국방 관련 지출 통계, 215쪽〉



〈'OECD Factbook 2008', 복지 관련 지출 통계, 213쪽〉

● 종속 경제의 위기

우리 경제는, 분단으로 자립적 민족경제의 수립이 좌초된 상태에서, 미국이 선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무분별하게 끌려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과 농업이 무너지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대외의존성으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공황이라는 태풍 앞의 등불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유린

남북 대치 상황을 빌미로 반전 평화, 통일운동 단체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배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위한 정당도 국가보안법의 탄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사상과 언론,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국정원법, 비밀관리법 등 반민주 ‘MB악법’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맹목적인 미국 찬양과 군사주의 문화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끝내야

7천만 겨레가 반세기 넘게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전쟁 위협을 제거하려면 지금의 정전상태를 시급히 평화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전쟁상태를 국제법적으로 종결짓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자 항구적 평화상태를 담보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평화협정이란?

전쟁을 치른 당사자가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끝내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정치·군사조약. 평화협정에는 보통 종전선언, 정치·외교관계 정상화, 영토 경계선, 외국군대 문제, 군비 축소, 분단국의 경우 민족자결 또는 통일문제, 평화감시기구 구성 등이 포함됨.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정세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적대와 희생을 강요해 온 분단체제가 해체되고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1978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악수하는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좌), 베긴 이스라엘 총리(우)와 이를 중재한 카터 미국 대통령〉

평화협정 정세의 도래

부시정권은 무력침공 위협, 경제봉쇄, 정치·외교적 압력 등을 통해 북을 굴복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시정권의 대북 압살정책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의 강력한 맞대응으로 실패했습니다.

강압에 실패한 미국은 협상 외에 달리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세기 이상 회피해 오던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자회담 9·19공동성명(2005년)과 2·13합의(2007년)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합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세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는 또한, 냉전 해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국 민중의 자주의식 성장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는 돌이키기 어려운 세계 정세의 거대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2.13 합의 뒤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6자회담 2단계 합의에 따라 북핵 불능화와 신고,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가 이뤄졌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와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북미 간 직접대화와 6자회담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오바마 진영은 2012년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를 모두 함께 해결하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에너지와 북한 주민들의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혀 핵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방한 기간 중 스티븐 보즈워스를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보즈워스는 북에 대한 경수로(감속재와 냉각재로 보통의 물을 사용하는 원자로) 제공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초대 사무총장과 ‘클린턴-김대중’ 대통령 시절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하면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적극적이었던 인사여서 북미관계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성 김 신임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임명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왼쪽 두번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수석대표(맨 오른쪽)가 자리를 함께 했다.〉

북은 2009년 1월,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처음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천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북은 지난 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에 북미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 북미 간 군사회담을 통해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미 6자회담 산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에서는 ‘양자동맹의 필요성과 체제 선택의 자유 문제’ 등 핵심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포럼’을 열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영변 5MW급 원자로 냉각탑 폭발〉

침략적 한미동맹과 이명박의 대북 강경책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걸림돌

군사적 일방주의와 신자유주의로는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미국은 ‘동맹을 통한 패권 추구’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즉, 동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동맹국의 자원(군사력, 자금 등)을 동원하여 자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PSI 훈련)

오바마 정권 역시 부시 정권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세계 어느 지역으로든 제 맘대로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을 마련(전략적 유연성)하는 한편, 난관에 빠져있는 아프가니스탄 침략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을 관철시키고,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미군 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과 교리에 따른 한미 공동작전계획의 대북 선제공격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북침 전쟁연습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 나포 등을 노리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북 위성발사때 PSI 전면참여 검토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정부, 훈련 참여·물적지원 뜻...북·중 강력반발 예상

정부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다음 달 4~8일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성인은 발사를 강행하면 군사적으로 결국 대량살상무기 기술에 해당한다"며 "군사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피에스아이 참여 필요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최근

는 방안을 내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2003년 미국 주도로 피에스아이가 정식 출범한 이래 남북관계 등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피에스아이 8개 항 가운데 이들 3개 항에 대해선 참

가 시작될 것이고, 여기에 (한국이) 피에스아이에 들어가고 하면 한동안 한반도 정세가 크게 출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2월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내어 미국 주도의 피에스아이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규정하며, 당시 한국 정부의

〈한겨레 2009. 3. 20〉

미국은 한미동맹을 구실로 한미 FTA 등 불평등한 경제관계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영구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이른바 ‘한미 전략동맹’을 내세우며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한편,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폭압통치를, 북에 대해서는 강경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행동대장격인 이상희 국방장관은 대북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주장하는가 하면, 서해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 일선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고 밝히는 등 위협천만만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서해 연평도 등에서의 도발에 대비해 F-15K에 선제타격을 위한 비상대기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2009. 3. 10)

이 같은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와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李국방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발언...北 자극?

“군사도발 시 北 전지 타격”...현 상황 인식 부재 ‘파문’ 예상

[2009-02-21 06:00:00]

CBS정치부 박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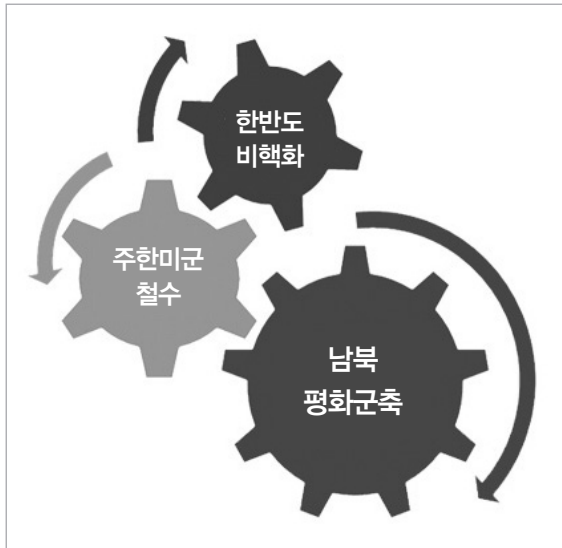


←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국방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한반도 비핵화, 미군철수, 남북군축 함께 해결하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떨쳐나서야

핵실험 등으로 50여 년 만에 미국을 평화협정 논의 테이블에 끌어낸 북의 주동적 대응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내세운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협정 체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과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온 대북 적대적 성격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을 고집한다면 북미관계의 진전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할 절회의 기회이자, 침략적 성격의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이 영구화될 수도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50여 년 만에 열린 평화협정 정세가 결실을 맺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보장하려면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남북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동맹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북핵 포기와 함께 미국의 대북 핵 위협과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모두 제거하는 온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 간 군축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정세가 저절로 우리에게 평화협정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나부터 먼저 미군철폐와 동맹폐기,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군축을 함께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자주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 세상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퐁네프의 연인들’의 줄리엣 비노슈
“아직도 많은 미군 주둔 사실 놀라워”

한겨레

비노슈는 18일 열린 내한 회견에서 “한국을 많이 몰라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왔다”고 운을 뗐다. “한국이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가라는 걸 알게 됐다. 폴란드와 비슷한 면이 있어 마음이 아팠다. 폴란드도 자의와 상관없이 반쪽은 러시아, 다른 반쪽은 독일 쪽에서 지배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그는 “와보니 한국은 새롭고 기분 좋은 발견”이라고 첫 느낌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많은 미군이 주둔한다는 사실도 놀랍다”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변화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웃음을 터뜨렸다.



〈한겨레 2009. 3. 19〉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충분히 가능하다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더 이상 외국군대가 우리 땅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도 모든 외국군대 철수 문제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현재 남아있는 외국군대인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는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고, 50년이 넘게 전쟁 위협에 시달려 온 북한도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너 페리노 전 백악관 대변인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도 “만약 주둔국 국민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연합, 2008.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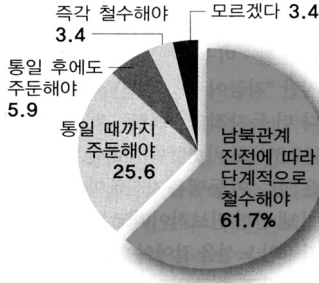
중국 또한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인 한미동맹을 “지나간 역사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중국 역시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항리폭격장과 덕수궁 터 미대사관 건축계획이 우리 민중의 투쟁으로 폐쇄되거나 철회된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여중생투쟁 때의 100만 명이 넘는 서명과 10만 명의 광화문 집회 등은 미국 지배층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정치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2003년 남미의 비에케스 미군 폭격장도 주민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폐쇄되었고, 필리핀에서도 민중의 투쟁과 압력이 바탕이 되어 미군기지가 폐쇄되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도적 다수의 남측 민중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면 그 실현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주한미군을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기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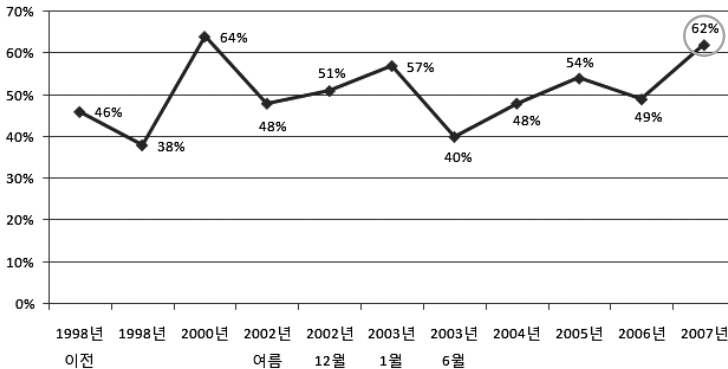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언제? (뉴스위크 한국판 2008년 4월 23일자)〉



- 조사방법 : 전국의 만 19세 성인 남녀 800명을 지역 · 성 · 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로 질문.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pm 3.5\%$ 포인트.
- 실시기간 : 2008년 4월 7~8일.
-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지지율 변화 (중앙일보 여론조사)〉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여론(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즉각철수	4.9	3.2	10.9	5.0	10.4	8.9
조건부 철수	51.1	60.1	41.2	75.0	70.7	61.6
통일 후 철수	24.9	29.7	35.4	14.0	16.2	19.5
통일후에도 계속주둔	4.3	6.7	10.9	6.0	2.6	8.8

● 조건부 철수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거나 한국의 방어능력을 충분히 구비할 경우에 철수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출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1998-2003.

평화협정 실현운동, 이미 시작되다

2008년 3월 24일, 평통사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가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을 개최한 이래로 2008년 한 해 동안,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약 4천여 명의 ‘추진위원’과 이 운동을 지지·성원하는 1만 5천여 명의 ‘길잡이’가 모였습니다. 각 지역과 부문에서 평화협정 실현 운동의 토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27일에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다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차례의 신문광고(전면광고 1회 포함)와 수많은 집회·간담회·강연회·캠페인·평화 카페·등반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08. 7. 27.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

평화협정 체결되면 이렇게 좋아져요

● 평화협정 체결로 예측에서 자주로!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700여 개의 각종 불평 등한 한미 간 협정 폐기.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나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PSI) 등 대북 적대정책이 설 자리를 잃음.
-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뿌리칠 수 있음.
- 20조 원에 달하는 기지이전비용, 매년 8천억 원 안팎의 방위비분담금 등 미군주둔으로 인한 각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됨.
- 평택미군기지 확장, 무건리훈련장 확장 등 미군기지와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 생존권 박탈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여중생 압사사건, 성폭행 등 미군범죄와 매향리 폭격장 오염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파괴로부터 자유로워짐.
- 한미 FTA로 인한 불평등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



〈2002년 겨울,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에서 평화로!

-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국교가 수립되며, 상호 불가침이 보장되어 군사적 대결과 한반도 전쟁 위험이 사라짐.
- 북핵 폐기와 연동하여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제거됨으로써 남북이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짐.
-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남북 평화군축이 이뤄져 남북 군사적 대결과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멈출 수 있음.
- 분쟁지역인 비무장지대와 서해 해상이 각각 평화지대와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으로 바뀌어 상생과 평화의 장으로 변모됨.
- 외국 군대와의 전쟁연습이 중단되어 무력시위와 전쟁 위험이 사라짐.

● 평화협정 체결로 분단에서 통일로!

-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한미동맹이 폐기되면 자주적 평화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약속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 이행이 전면화되고 더욱 진전된 남북 합의도 채택되게 됨. 이에 따라 남북은 곧바로 통일로 나아가게 됨.
- 남북 연합·연방 정부와 의회가 구성되고 단일국호 유엔가입이 이뤄짐.
- 중립 외교의 길이 열리고 연방군 창설이 준비됨.
- 남북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민족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림.
- 사회문화적 교류가 대폭 확대되고 통신과 왕래가 자유로워짐.

● 평화협정 체결로 빈곤과 박탈에서 복지와 번영으로!

- 매년 5조 5천억 원이나 되는 미국 퍼주기 비용을 없애고 남북 군비경쟁으로 인한 현재의 과도한 국방비를 1/2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음.
- 이 비용을 민생복지비로 전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이 실현되어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육아 부담과 교육기회 박탈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군 복무기간도 1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젊은이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음.

〈미국 퍼주기 비용〉

내역	비용	비고
방위비분담금	7,600억 원	2009년도 예산
기타 직·간접 지원	7,646억 원	2006년도 결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2,679억 원	2009년도 예산
무건리훈련장 확장비용	753억 원	2009년도 예산
미군쓰레기탄약 처리비용	178억 원	2009년도 예산
한미연합연습비용(위계임분담)	52억 원	2009년도 예산
과학화 훈련 등 한미연합사 운영비	54억 원	2009년도 예산
미 통신선 사용	9억 원	2009년도 예산
아프간 파병비용	7억 원	2009년도 예산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1천억 원 이상	1조 원(최소 치유비용) ÷10년(치유기간)
미국산무기 도입비용 (공중조기경보통제기, F-15K, C4I 등)	3조 5천억 원	2007년 통계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 발언)
계	매년 5조 4,978억 원 이상	

• 국방비 1/2로 줄이면 민생복지 얼마나 좋아지나? (2009년 기준)

미국 퍼주기 비용(약 5조 5천억 원)을 포함한 국방비(2009년 예산 28조 5,326억 원)를 1/2로 줄이면,



14조 2,663억 원의 예산 확보 가능

항목 및 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정규직(월급 1백만 원) 50만 명을 정규직(월급 2백만 원)으로 전환	50만 명×100만 원×12개월	6조 원
농어가 부채 48조 5천억 원의 이자 면제	3조 5천억 원	3조 5천억 원
빈곤층 1백만 가구 건강보험료(가구당 6만 2,374원) 전액 면제	1백만 가구×6만 2,374원 ×12개월	7,485억 원
대학생 등록금 8조 원(총 12조 원 중 장학금 2조 원 · 고소득 가구 2조 원 제외)의 1/2 지원	8조 원÷2	4조 원
계		14조 2,485억 원

〈국방비를 1/2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근거〉

- 인구 8천 2백만 명인 독일의 군인수가 28만 명인데 비해 인구 7천만 명인 남북한의 군인수를 합치면 184만 명이나 됨.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
- 그 배경에는 분단과 전쟁, 정전으로 인한 남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와 대결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
- 국방비가 많이 드는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 군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전력을 갖추려 하기 때문임.
- 따라서 남북이 평화와 통일을 이루면 남북의 적대감이 해소되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병력이 필요 없어지므로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남북의 군인 수에 대해 평화체제 단계에서는 남북 각기 24만~28만 명, 통일 단계에서는 남북 통합 24만~28만 명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국방개혁2020의 문제점과 자주적 국방개혁의 모색』,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2』, 한울, 2007, 203~205쪽 참조)가 있음. 이를 보더라도 국방비를 1/2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

국민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미군철수와 동맹폐기, 한반도 비핵화, 남북군축을 함께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자주, 통일의 길을 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이를 관철하려면 침략적 한미동맹을 고수하려는 한미 당국의 힘을 압도하는 국민적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모임과 행사를 통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절박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운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앞장서서 각 지역과 부문에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데 기초하여 범국민적인 평화협정 실현 운동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구가 국민과 6자회담 당사국들을 상대로 범국민적인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2009. 2. 14. 2009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

평화협정 실현운동, 이것이 궁금해요.

주한미군이 나가면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늘어나지 않나요?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북한의 610배나 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감 2007에 따르면 남한 국방비는 218억 달러에 달하나 북한 국방비는 50억 원(한국은행 북한 원화 공식 환율 1달러 당 140원을 적용할 경우 약 3,570만 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간 국방비는 '70년대부터, 누적 국방비는 '80년대 초반부터 남한이 앞서기 시작했고, 북한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져든 냉전 해체 이후에는 그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 결과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은 북한에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이미 과잉전력이며,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이를 메우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계속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유는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라는 공세적인 작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맺고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비용 등 미군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남북 간 재래식 군축이 이루어지면 지금처럼 대규모 첨단 전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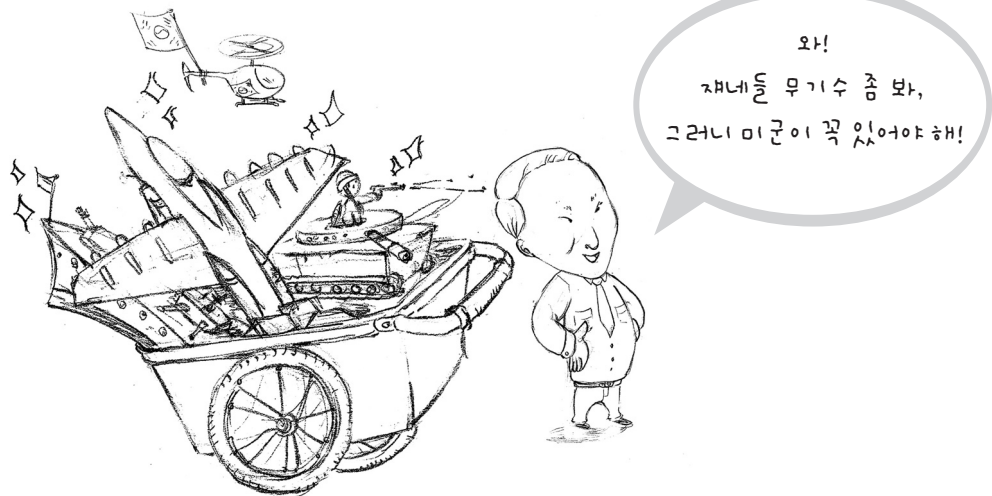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현재 남북한 합쳐 184만 명이나 되는 군인수를 20~30만 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 정예의 군대를 꾸리면 주변국으로부터 통일 한국을 방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듯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국방비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북한이 남침하지 않을까요?

럼스펠드 전 미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GDP가 북한의 25~35배나 되고, 전방의 역지력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연합, 2003. 3. 7)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시는 2000년 1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장비는 모두 낡아서 “남침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게임 전문가 제임스 더니건도 북한의 전투력이 남한의 약 38%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도 『2006 국방백서』에서 “현재의 대북 전력은 양적으로는 열세하나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75쪽)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거치면서 북한이 남한에 군사 요충지인 개성을 개방하거나 해주항을 개방하기로 할 만큼 남북관계가 진전된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협론’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계속되어야 예산과 일자리를 더 확보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국방부와 무기업체, 공안기관, 그리고 반복 대결의식이 확산되어야 기득권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구 정당과 언론 등이 끊임없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군사력 비교를 통해 본 북한 위협론의 허구〉

비교 방식	내용 설명
무기 개수 단순 비교	- 국방부 통계는 북한 무기수 부풀리기, 남한 무기수 줄이기로 신뢰하기 어려움 - 무기의 질적 측면 반영 불가 :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 무기의 40%, 해군 함정의 70%, 공군 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 장비”(육군본부, 『정훈교재』, 1999년)
국방비 누계 (매년 국방비 합계)	남한 당국이 추정하는 북한 군사비(북한 발표의 3배 이상 계산) 누계에 따르더라도 남한이 3배 이상 많음.
종합적 전쟁수행 능력	인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행정력 등을 망라한 총체적 국력으로서, 국방부도 1990년대 초부터 남한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국방부, 『국방백서』, 1990년)
기습공격 가능성	탱크 부대, 특수부대, 미사일 공격 등 어떤 방법의 기습으로도 북한이 남한을 이길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 주둔 명분의 허구성과 철수의 당위성',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한울, 2005, 231~244쪽 참조〉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미국의 초당적 연구자들이 작성한 대서양위원회 보고서(2007.2)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2년 핵태세보고서(NPR)나 개념계획(CONPLAN) 8022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테니스 블레이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체제위협이 없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베트남전 당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의 군사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대입해 보면, 북한 전술 핵무기의 위력은 한국군 기지 한 곳을 파괴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군사전문가 패트릭 모건은 “북한이 핵을 갖게 된 상황이라고 해도 한국의 재래식 억지전력이 실패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선제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자위를 위한 억지력으로 필지언정 남한을 공격하여 승리할 정도의 위력은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진전되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도 있지 않나요?

국방부의 『화·생·방·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료(183쪽)에 따르면 정확도가 낮은 탄도미사일은 군사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B나 스커드-C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호력을 갖추고 있는 군 지휘본부나 군용 비행장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개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지수이나 이런 사실은 한편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탄도미사일을 도시 민간인 밀집지역을 겨냥하여 발사하면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으나 이는 국제법적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재래식 군사력에서 훨씬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제한된 숫자의 미사일을 상대 군대를 타격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쟁에서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되지!
우리 서로
무기 내려놓는 게 어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미국자본의 철수, 무역보복,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낮추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자본의 철수에 대해서 보면, 자본은 속성상 이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치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유엔다국적기업연구본부의 한 조사보고서는 “정치적 위험의 측정이 경제적 영향과 병행해서 연구에 포함될 때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한국 재무부 경제협력국 번역,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1992, 110쪽)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좌파집권 중남미 경제 “잘 나갑니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비아의 자립국유화 선언 등 ‘좌파 혁명’이 거세게 불고 있는 중남미 경제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최근호가 보도했다.

보수성향인 (미코노미스트)은 올해 중남미 경제가 활기를 띠었다. 1980년대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이는 물가상승을 하라, 경상수지 흑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를 하라, 빈곤을 하라 등 최근 중남미의 급진적 경제개혁 조처에 의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프림은 올해 중남미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했다. 1980년대 이래 가장 높았다. 2004년 5.9%보다 높다.

또 지난해 중남미의 물가상승률은 3.1%로, 2001년 6.1%를 제외하면 1960년대 이래 가장 낮다. 중남미 평균 경상수지 2003년보다 3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개발은행(ADB) 통계에 따르면, 중남미와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채율은 2002년 72%에서 지난해 53%로 크게 줄었다. 이는 중남미 국가를 재정이 여전한 다발한데로움을 의미한다.

중남미의 경제성장은 중국과 인도와 함께 주요 급속히 신흥을 열었다고 〈이코

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중국은 앞선 손실 등에 필요한 구리를 칠레와 페루에서 수입하고, 칠레와 페루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번 주와 중남미는 중남미산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선진국 시장의 낮은 금리도 기여했다. 낮은 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새 수익원을 찾아 중남미를 포함한 신흥시장에 투

한 자금을 보냈다. 2002년 전체 인구 대비 평균 지출은 44%였으나 지난해의 40% 정도에 감소했다. 또 시몬은 국민연금 비율이 1998~2000년에 반으로 줄었다. 브라질도 주독본에 불평을 정도를 나타내는 지나치게 수기 최근 10년 사이 13% 이상 내려갔다. 영국 왕립국제관계연구소가 발행하는 스미 연구원칙 박해 버마 도마드 21일

올 성장률 6% 전망...80년대 이후 최고치
소득불평등 개선...자원 국유화 효과에 촉각

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중남미 금융 시장에는 들어온 자금은 30억 달러로, 2004년 978만 달러나 2003년 4억3600만 달러에 견줄 정도로 급증했다. 서방 세계 일부의 우려와 달리, 좌파 정부와 맞서 싸우는 집권파의 이 지역이 투자자들에게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1990년 최고치에 이른 빈곤률도 감소 추세를 돌아섰다. 2003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와 페루가 중남미 18개국을 조사해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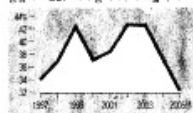
한 자료를 보면, 2002년 전체 인구 대비 평균 지출은 44%였으나 지난해의 40% 정도에 감소했다. 또 시몬은 국민연금 비율이 1998~2000년에 반으로 줄었다. 브라질도 주독본에 불평을 정도를 나타내는 지나치게 수기 최근 10년 사이 13% 이상 내려갔다. 영국 왕립국제관계연구소가 발행하는 스미 연구원칙 박해 버마 도마드 21일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중남미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빈곤층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남미에 지적 있는 빈곤층이 중남미 경제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

중남미와 GDP 증가를 주미



중남미와 GDP 대비 경제성장률 비율 주미



(출처: 세계은행, 2005년 1월 15일 기준)

다고 밝혔다. 중남미는 또 중남미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대비해 긴축재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원자재 불요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국가 가운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칠레와 페루에만 있다고 전했다. 또 고 자선 비네스올라에 불평에 대해서는 “버는 대로 돈을 쓴다”고 고집했다. 최현정 기자 kshim@shin.com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뜨겁게 타올랐지만 외국인투자가 전혀 위축되지 않은 것이나,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정권이 2000년대 들어 속속 들어선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것(한겨레 2006. 5. 27)은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 잠재력이 다른 정치적 요인보다 외국인 직접투자결정에서 더욱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주한미군이 나가고 남북 사이에 군축이 이뤄지면 한반도가 중장기적인 정치군사적 안정을 이루게 돼 투자 환경이 더욱 좋아지게 되어 외국 자본이 나갈 가능성보다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큼니다.

무역보복의 경우 보복 관세나 한국의 수출 할당량 축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일방적 무역보복조치는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세계경제의 밀접한 상호연관으로 인해 미국이 무역보복을 하는 순간 미국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북한核·反美, 한국信用度에 큰영향 없어”

S&P 국가신용평가총괄 존 챔버스 상무 현지 인터뷰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서 국가신용도 평가를 총괄하는 존 챔버스(Chambers·47·사진) 상무는 7일(현지 시각) “북핵 위기와 반미감정이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릴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다”고 말했다.

챔버스 상무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7%대로 높이려면 우선 인명피해를 서두르고, 주요 재벌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더욱 건전하게 유지하는 등 2단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핵 위기가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가?

“북핵의 북핵 사태는 전쟁 발발 위험이 있는 1960년대만함이나 위

험한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 위험은 2000년 한국 전쟁 이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신용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최근 이러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위험이 당분간 올라가는 것

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에 대한 적대감과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P가 국가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는 98개국 중 다수 국가의 국민들이 부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좋아하지 않

투자자들, 한국 지정학적 위험 이미 감안
평가대상국 대부분 부시外交 안 좋아해
은행민영화·재벌 건전성 유지해야 7%성장

를 보일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기존의 몇몇 정책을 고수하는 한 심각한 수준까지 가지는 일은 없다.”

—한국에서 일고 있는 반미(反美) 운동이 확산되면서 미국인 투자자들이 나오고 자란 미국 내 반미(反美) 감정으로 반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신용

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에 대한 적대감과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P가 국가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는 98개국 중 다수 국가의 국민들이 부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좋아하지 않

을 받는다.”

—그렇지만 북핵 사태를 바라보는 한-미 간에 견해 차이가 상당한데.

“국가신용도를 평가 측면에서는 두 가지 위험도를 감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쟁 위험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선제 공격 가능성은 없으며, 김정일의 하세와으를 장만 성공하고 있다. 둘째는 북한 경제의 파탄으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핵 발진책이 북한의 붕괴를 지연시켜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 비율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배가 될 정도로 엄청나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뉴욕 월가(街)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빠져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 그런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했다. 투자자들 모두 이미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만한 위 투자를 할 상태다.”

/뉴욕=송재홍 특파원
is@kchoon.com



○S&P의 존 챔버스 상무는 “국가신용도는 한 국가가 부채를 적절 상환할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뉴욕=송재홍 특파원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정치적 이유로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북한 핵 위기가 심각하고 반미 분위기가 높았던 2003년 초 한국의 신용도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힌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필리핀이나 파나마에서도 미군이 그곳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철수했지만 그로 인해 그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미군철수를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수단과 명분, 현실적 가능성, 역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와 통일의 길이 활짝 열려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남북 대결로 인한 소모적 비용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더욱 잘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04년 한국은행은 총 850만 평이 조성되는 개성공단사업의 1단계 공사 완료 후에는 남측 경제에 연간 생산 9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창출 2조 7천억 원의 직접 효과를 예측하고 있고 3단계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연간 생산 83조 8천억 원, 부가가치 창출 24조 4천억 원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과 북의 살길이 남북 협력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조차 미국의 갖은 방해(북한의 핵실험 때 사업 중단 요구,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불인정 등)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미국의 방해 없이 남북 경제가 상생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주변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않을까요?

주변국 위협론도 과장이거나 허구입니다. 미 국방부장관이 미 의회에 보낸 『동맹국의 방위분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미국의 27개 동맹국(미국 포함) 중 지상군 전력이 2위, 공군 전력은 8위, 해군 전력은 7위에 해당하는 군사 강국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지상군 6위, 공군 5위, 해군 2위입니다.(미국 국방부장관,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3. 7, C-3쪽)

중국의 군사력은 대만에 비해서 질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양안 지역의 제공권도 대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려 1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자국을 방어하기에도 벅거우며, 자국 내 수많은 소수 민족들과의 분쟁에 대응하기에도 여유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으로 재래식 무기가 감축되었으며, 경제력 약화로 감축된 군사력마저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경제력 호전으로 다시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자국 내 소수 민족들과의 분쟁에 대처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아직까지 군사력이 취약합니다.

이렇듯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침공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협론’이 득세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잠재우고 한미동맹을 영구화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미동맹 세력의 거짓 선전 때문입니다.

(중국 위협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 위협론의 실체’,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2』, 한울, 2007, 410~444쪽 참조)

주한미군이 나가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은 한반도와 양안(중국·대만 사이)입니다.

평택(K-6) 미군기지는 송탄(K-55) 공군기지와 함께 중국 포위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행사로 중국과 대만 분쟁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그 기지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동북아 군사적 대결은 미국·일본·한국·호주·대만을 한 축으로 하고 중국·러시아·북한을 한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일·한·호·대만 축이 중·러·북 축에 비해서 군사비와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근원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전력입니다. 미군은 동북아 세력 균형자가 아니라 파괴자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의 세력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후 민족통일을 이루면 주변국들과의 등거리 중립 외교로 일본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뉴스위크 ‘미 국방부 중국 위협론은 과장’ 지적

“미 군비증강 정당화 술책”

“중국, 올해 군사비 미국의 10%…아시아만 전략목표”

중국의 군사비 증액 발표 때마다 나오는 ‘중국 위협론’은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미국 국방부에 의해 과장됐

1960년대 문화혁명 기간 중국의 군비 증가율은 연 6%를 조금 웃돌았고, 80~90년 연평균 2%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향한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스위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러·아·인도·파키스탄·북한 등 핵을 보

이런 평화협정 어때요?

여러 학자와 변호사, 활동가 등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 평화협정(안)은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입장에서 제시된 최초의 평화협정(안)입니다. 이는 50여 년 만에 열린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속에서 주한미군을 내보낼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정세에 대한 절박한 인식과 이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 한국전쟁 참전국이면서,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이 협정 당사자로 서명.
- 하나의 민족으로서 한국(조선)인의 자주와 주권, 영토보전 및 통일의 권리 규정(1장)
- 전쟁종료와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협정 발효 후 3년 내 외국군 철수 명시(2장)
-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과 국교 수립 등 관계 정상화와 불가침 규정, 미군 철수와 북핵 폐기 상호 연동 해결(3장)
- 남북 불가침과 경계선 규정, 군사동맹 해체와 관련 조약 폐기 명시, 자주적·평화적 방식의 한(조선)반도 통일 규정(4장)
- 평화시대 설치 및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실시(5장)
-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및 국제평화감시위원단 구성(6, 7장)

〈한반도 평화협정(안) 전문은 첨부자료, 평화협정(안)에 대한 해설자료는 평통사 홈페이지(peaceone.org) 평화군축자료실 248번 자료 참조〉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기안자와 제안자

●기안자(가나다 순)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한미관계 연구회 회원) 노정선(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박기혁(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재봉(원광대학교 교수) 이철기(동국대학교 교수) 장경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정상현(한미관계연구회 회원) 조주형(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지도위원, 공군 F-15K시험평가단 단장 역임)

●제안자(가나다 순)

•국내

강남훈(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이사, 한신대학교 교수) 권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상곤(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신대학교 교수) 김세균(서울대학교 교수) 김승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준기(전 민주노동당 당기위원장, 전 신구대학교 교수) 김진환(동국대학교 강사, 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한성(교수노조 위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노중선(4월혁명회 상임대표) 박래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박용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배성인(한신대학교 교수) 설창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심재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광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재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정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장연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장창준(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조돈문(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희연(성공회대학교 교수)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철영(대구대학교 교수)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수) 황정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해외

고게츠 아츠시(일본, 야마구치대학교 교수) 한호석(미국, 통일학연구소 소장)

| 첨부자료 _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당사국들이라 한다)은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규정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조선(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 제4조 60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세기 넘게 한(조선)반도에서 이어져 온 정전상태를 끝내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며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당사국들은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오래 동안 고통을 받아온 한국(조선)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이 협정이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아가 당사국들은 이 협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1장 한국(조선)인의 기본 권리

- 1조 한국(조선)인은 자주와 주권, 영토보전, 통일의 권리를 가지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를 존중한다.

2장 전쟁종료와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외국군 철수

- 2조 당사국들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된 한국(조선)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정전협정은 이 평화협정 발효와 동시에 폐기된다.
- 3조 ① 미합중국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정전 임무를 맡아온 국제연합군사령부를 이 평화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해체한다.

② 당사국들은 국제연합에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 27일 결의 83호(S/1511) 및 1950년 7월 7일 결의 84호(S/1588), 유엔총회의 1950년 10월 7일 결의 376호(V)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 4조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대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3년 안에 단계적으로 그 인원과 장비를 완전히 철수하며 외국군 기지도 모두 철거한다.
- 5조 미합중국은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대한민국 영역 안으로 어떤 인원이나 장비도 들여오지 않는다. 다만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시까지 병력의 1:1 교체를 허용한다.
- 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지원군은 철수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없음을 확인한다.
- 7조 한국(조선)전쟁의 적대 쌍방 당사자들은 전쟁 과정과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상호 이해와 화해의 정신에 따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법률적 또는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사국들은 한국(조선)전쟁 과정 또는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도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 및 불가침

-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며 이에 필요한 상호 조치를 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각기 상대방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 및 10·3 합의를 준수한다.
- 12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합중국은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철수시킴과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폐기한다.
- 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등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

4장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침과 통일

- 14조 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②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나 규정은 개정 또는 폐지한다.

15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16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저촉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17조 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기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상호 이해와 화해, 평화증진 그리고 국제해양법을 존중한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의로 정한다. 세부 사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④ 위 지상·해상·공중 경계선과 관할구역은 통일 이전까지의 잠정적인 불가침경계선과 관할구역이다.

18조 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쌍무 군사동맹을 맺거나 다자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3년 안에 각기 기존 군사동맹을 해체하며 이와 관련된 조약 또는 협정을 폐기한다.

② 위 1항에서 폐기하기로 한 조약 또는 협정에는 한(조선)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나 무력 통일을 허용하는 조약 또는 협정이 포함된다.

19조 한(조선)반도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하고 외국군 기지가 철거된 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국 군대의 주둔이나 외국군 기지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20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에 관한 선언'에 따라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상호 합의 아래 외국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룬다.

5장 평화지대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 21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의 우려를 완전히 없애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서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 22조 ①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바꾸며 이 평화협정 체결 전에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군사시설 또는 장비는 모두 철거, 폐기한다. 또 평화지대에서는 병력 주둔이나 군 시설 설치 는 허용되지 않으며 군사연습을 포함한 군사활동이 일체 금지되고 민간 통행이 보장된다.
- ② 평화지대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민간통행 보장과 공동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 23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두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 하며 그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해 해상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합의를 존중한다.
- 24조 한(조선)반도 안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어떤 외국군과도 연합 연습과 훈 련을 하지 않는다.
- 25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대방에 대한 기습공격의 우려를 없애고 우발적 무력충돌 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부대이동, 군사 연습과 훈련의 통보 및 통제,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 치·운영,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시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 26조 한(조선)반도에서 군비경쟁을 막고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은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상호군축을 실시한다.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도입 금지, 대량살상무기 및 공격능력의 제거 등 상호 군축의 세부사항은 부속 합의서에 따른다.
- 27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접수 또는 배치하지 않으며 다 른 나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지 않는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조선)반도 비핵화가 지켜지고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6장 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 28조 ①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의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②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3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 기지의 철거(4조)
3. 주한미군 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5조)
4. 한(조선)반도 비핵화의 준수(11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2조)
6.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연습 및 훈련 중지(24조)
7.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6조)
-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4자 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미군철수가 완료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가 폐기되면 해소한다.

29조 ①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기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2조)
2.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의 관리(23조)
3.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연습 및 훈련 중지(24조)
4.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사적 신뢰구축(25조)
5.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6조)
-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의 구성, 업무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30조 4자 공동군사위원회와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전원 합의의 원칙 아래 활동하며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평화감시단에 제출하고 그 조정에 따른다.

7장 국제평화감시단

31조 ① 이 평화협정이 이행되는 것을 감독하고 이행 과정에서 당사국들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제평화감시단을 둔다.

② 국제평화감시단은 스위스, 스웨덴,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5개국 대표로 구성한다.

32조 ① 국제평화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이행 상태를 감시·감독하고, 이를 당사국들에게 보고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3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 기지의 철거(4조)
 3. 미군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5조)
 4. 한(조선)반도 비핵화의 준수(11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2조)
 6.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2조)
 7.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관리(23조)
 8.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연습 및 훈련 중지(24조)
 9.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사적 신뢰구축(25조)
 10.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6조)
- ② 국제평화감시단의 의장은 이 감시단이 정하는 기간을 주기로 각국 대표들이 윤번제로 맡는다.
- ③ 국제평화감시단의 주요 소재지는 판문점에 둔다.
- 33조 국제평화감시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시반을 편성한다. 당사국들은 이 감시반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 34조 국제평화감시단은 협의와 만장일치의 원칙 아래 운영된다. 국제평화감시단은 이 평화협정 이행과 관련한 감시·감독 업무가 끝나면 종료된다.

8장 부칙

- 35조 이 평화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36조 이 평화협정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유효하다.
- 37조 이 평화협정은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 38조 이 평화협정은 한국(조선)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고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〇〇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〇〇〇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〇〇〇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〇〇〇